

‘정치시즌’ 돌아왔다... ‘정치아카데미’ 창립 봇물

‘나무들 정치아카데미’ ‘새정치 경제아카데미’ 등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전남 정치권 ‘전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 정치 관련 아카데미 및 정책연구소 등의 창립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큰 실망감에 빠져있던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양새로 보인다.

24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우선 조국현 내과 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나무 심는 사람들이 ‘나무들 정치아카데미’를 내달 6일부터 시작한다. 개강식에는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로컬 스테이트크래프트(Local Statecraft)와 리더십’을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한다.

이어 정당개혁, 호남정치, 혁신 거버넌스, 도시혁신 등의 주제로 총 7회의 강사가 이뤄지며, 2차례 워크숍도

개최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윤 이사장을 비롯한 전남대 오승룡 교수, 한귀영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 한의정 충남도지사, 신임 민주통합당 당 대표 등이 참여한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장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경제아카데미’도 오는 29일 개소식을 갖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새정치·경제 아카데미에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학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자로 알려진 조 교수를 비롯,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 지지세력 일부도 포함돼 있다.

조장관 이사장은 “사람이 희망인 호남에서 함께 손잡고 더불어 커 나 갈 인재들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가정(사)지역정책개발연구원 중앙회도 오는 26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해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자발적 지지모임이었던 철수정책개발연구원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발기인으로 대거 포함됐다.

연구원은 지방자치관련 제도 및 국

가시민사회 등의 정책조사·개발·연구·평가·학술적 문화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당과 학계, 전문가들이 만든 정책연구원들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부족했다”며 “정당을 떠나 시민들이 자신의 삶 속에 녹아나는 정책을 직접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방자치관련 제도 및 국



국회 정보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국정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추미애, 김현, 김민기 의원. /연필뉴스

추경 정책질의 첫날부터 파행

예결위 야당의원 퇴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정책질의를 시작했지만 오전 한때 정회 되는 등 첫날부터 파행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17조 3000억원 규모인 추경예산의 결반을 훨씬 웃도는 12조원이 세입(歲入) 결손 보전용으로 편성된 탓에 실제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이가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30조 슈퍼추경’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세입보전용”이라며 “이런 가짜·탈법적 추경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전일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만큼 정 총리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거듭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 총리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예결위 회의를 퇴장했고, 오전 정책질의는 무산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정 총리가 “정부의 미흡한 경제 예측과 세입 전망으로 인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해 정책질의는 정상화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MB가 박근혜에 준 선물”

“국기문란 행위...국민앞에 사과해야” 공세 수위 강화

민주통합당은 24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 하면 ‘신·구정권 합작설’까지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설훈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정원은 사과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준엄한 기록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 해 9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2년 만에 단독회동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 시점을 전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요원 활동이 집중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 전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선물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이보다 더 큰 국정원안기 무엇이길래 박 대통령은 침묵하는가”라며 “박 대통령은 즉각 전세운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국정원 및 경찰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를 지시하고, 이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2017년 전사업장 시행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정안은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정복 안행부 장관 기자간담회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광역의원 유급보좌관 필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4일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청와대 지방자치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지방치는 22년의 역사가 있는데 부작용·낭비·자질론 등으로 부정적인 면만 증폭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데 수십명의 예산을 다루고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다룬다. 광역의원은 안 된다. 논리가 맞느냐”고 반문한 뒤 “재정문제도 사무관 5호봉 수준으로 하면 240억원 정도 들고 그마저도 공동보좌역제 등으로 운영하면 더 절약할 수 있다”며 “또 그동안 사무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정 활동을 했는데 이제는 사무처 인

력을 보좌관 인력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유 장관은 “구의회 폐지안, 구청장 임명제 등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효율성과 편의성,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어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에 대한 안행부의 역할에 대해 “안행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더 대표적인 것이 행사·축제, 청사 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와 지방재정정보 공개”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방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2고단 3452	주식회사 거부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5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3462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59	고려중기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471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65	유한회사 동강흥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3492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73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01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97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09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106	주식회사 거부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17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114	주식회사 거부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26	유한회사 광곡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122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36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131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45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193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66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02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75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12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84	유한회사 나주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21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90	고려중기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29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598	유한회사 세림상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44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07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51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13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55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23	주식회사 거부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64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40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73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48	주식회사 광성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281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56	고려중기특수화물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366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63	주식회사 거부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373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73	유한회사 송강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382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84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392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95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401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3699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463	주식회사 동강리지스텍	도로법위반
2012고단 3704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486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11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16	합자회사 천일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28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25	유한회사 대명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37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33	유한회사 동강상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4045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42	주식회사 사라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63	유한회사 영산문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71	주식회사 국보운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78	주식회사 금성중기특수화물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85	유한회사 동강상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4693	주식회사 동강리지스텍	도로법위반
			2012고단 4702	주식회사 한국물류시스템	도로법위반
			2012고단 4710	주식회사 아인물류	도로법위반
			2012고단 4721	유한회사 하남흥운	도로법위반
			2012고단 4728	유한회사 영명물류	도로법위반

매 매

→ 대 478㎡, 건1475㎡, 2004년 신축
→ 6층건물, 엘리베이터 2대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분할매매 가능

목포, 2호광장 사거리 구, 맹수 한의원 건물

임 매

→ 6층건물
→ 6층 고급주택, 옥상 광고탑
→ 병/의원, 약국, 교회, 커피숍
체인점,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상담문의 011-611-9525
010-4667-9300

부동산경매

▶반토막 난 부동산! 지금이 찬스!
▶노후 대책은 부동산 경매로!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
▶단독/공동/소액투자 가능!
▶낙찰물건 실전 사례 교육!
▶1인1물건 추천

■강의기간 : 3개월, 주1회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저녁7:30~9:30)
토요일(오후5:00~7:00)
■강의장소 : 광주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강 의 료 : 개인 지도 1,100만원

엘피엘/특수물건

예약상담 H. 010-3605-5000

(주) 오 천 경 매